'베트남의 김 구' 우엔 후 창 본국 강제송환 모면

테러리스트 아닌 '정치범' 인정

국내 '인도 거절' 첫 사례
석방 돼 '가족 품으로'

27일 서울고법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베트남 민주투사 우엔 후 창(왼쪽)씨가 부인, 아들과 함께 석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엔 후 창(55·Nguyen Huu Changh)씨는 베트남 공산화에 항거해 지난 1981년 보트피플로 탈출, 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인이다. 그는 지난 1995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공산 베트남 반대 세력을 규합, 미국에서 '자유 베트남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시정부 수반도 지냈다. 우리의 대북방송과 비슷한 자유 베트남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다.

그는 또 2001년 6월 발생한 태국의 베트남 대사관 폭탄 테러를 지시하는 등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1순위 '반체제 인사'로 지목돼 베트남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올 5월 우리나라에 사업차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그가 체포되자 LA에서는 그를 석방하라고 베트남 교민사회가 연일 시위를 벌이고, 베트남에서는 공안 당국 관계자가 한국 법정까지 날아와 베트남으로 인도하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우엔씨를 테러리스트라기보다는 정치범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우엔씨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인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엔씨는 강제송환을 면하고 바로 석방돼 국내에서 출국이 가능하게 됐지만 베트남과 우리정부는 관계가 불편하게 됐다. 국내 법원이 외국인 피청구인을 정치범으로 인정,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두 달간 세 차례의 심문 절차를 거친 결과, 피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해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정치범으로 판단돼 인도청구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이 속한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의 성립배경과 활동내용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범죄인인도의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과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베트남이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국이 아니고, 미국 9·11테러 직후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구체적인 범죄인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정치범 불인도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세연구원,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주요내용

고소득 자영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미용성형·보약 등 현금영수증 못받아도 사후 인증
고소득자 세원파악 '올인'…징벌적 가산세 등 강화

빠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못받아도 사후에 신고해 인증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사용,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율도 40~7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변호사·의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세연구원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은 소득 파악률을 높여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소득파악이 미흡한 룸싸롱·사우나·골프연습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소득 파악 장치를 강화해 50~60%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의사·한의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미용·성형·건강증진의료비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목적 외에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세무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관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소득 전문직을 집중관리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도 현행 10~30%에서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40~70%로 높이도록 했다.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0~60%에 불과한 것이다. 또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의 1.15배에 달해 자영업자의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식장·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골프연습장 등 기업가형 자영업자는 소득의 25% 정도만 신고하고 75%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의 방안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득 노출 장치 강화, 징벌적 가산세 등 사후관리 강화, 감시기능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소득과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도입, 최대한 세원을 노출시키고 탈세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징벌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해 탈세 의지를 꺾는 한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3중 차단막을 펼치겠다는 방안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항공대 초소형 위성 발사 실패

러 발사체 추락… '한누리1호' 폭발한 듯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팀이 자체 제작한 초소형 인공위성 '한누리 1호(HAUSAT-1)'를 실은 러시아의 발사체 '디네플(Dnepr)'이 27일 발사 후 1분여만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교수에 따르면 디네플은 벨로루시의 인공위성 '벨카'와 함께 항공대 한누리 1호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초소형 인공위성 14개를 싣고 이날 오전 4시43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졌으나 1분 가량 뒤 발사장 남쪽 25㎞ 지점에 추락했다. 이에 따라 디네플에 실린 벨카와 함께 초소형 인공위성 15개가 모두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 1호는 장 교수와 이 대학의 학생 10여명이 2년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무게 1㎏, 가로 및 세로, 높이가 각각 10㎝다. 야구공 보다 약간 큰 '꼬마 인공위성'으로 제작비 1억9천만원이 투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코트라 해외조직 '부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원 "20곳 수출창출액 운영예산에도 못미쳐"

코트라의 해외조직 가운데 30% 이상이 성과부진에 시달리는 등 조직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외무역관 제도의 통·폐합 및 인력 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트라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의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및 투자 진흥 사업, 국내외 무역관 설치·운영, 내부 평가 제도 운용 등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트라 전체인력의 52%를 차지하는 해외무역관(75개국, 105개) 가운데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등 20곳은 연간 수출 창출액이 총 투입예산에도 못미쳤다. 이들 20곳을 포함, 연간 수출창출액이 100만 달러를 밑도는 해외무역관도 레바논의 베이루트 등 37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미 개별 기업들의 자체 네트워크가 어느정도 확보된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우 해외무역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과다 배치된 해외무역관을 거점별로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대신 브릭스(BRICs)와 아세안(ASEAN) 등 성장가능성이 큰 신흥 유망 지역 부분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통·폐합 대상지역의 경우 인력감축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 미국(9개)과 독일(4개), 일본(4개) 등 10개국에서 복수의 무역관이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병인·보육교사 등 일자리 90만개 창출"

정부, 범부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출범

정부는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지하철 이수역 부근 구산타워에서 장병완 기획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은 기획처와 재경·교육·노동·행자·문화·여성부 등 10개부처 22명으로 구성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제도 발전, 지자체의 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회보험제도 정비 등 관련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50%를 넘는 등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올해 사회서비스에 3천39억원을 투입해 이 분야에서 13만3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투입액은 방문 도우미사업 659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520억원, 공공성 산림숲 가꾸기사업 378억원 등이다. /연합뉴스